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중소기업 간편조사 확대… R&D공제 제출서류 간소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세무조사 간편조사 비중을 늘리는 한편, 간편조사 선택제 실시,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및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고위간부들과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장, 김기원 KIBA 회장산단 등 산업단 대표를 참석 하에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각종 첨단산업분야의 정보기술분야(IT) 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국세청은 연구개발기업들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기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참석 산업단 대표들은 국세청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중견기업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세무행정 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세율 60~70%

국세청은 22일 제7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탐10을 공개했다. 이는 주택 양도세과 관련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한 내용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10개안을 추린 것으로 납세자가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담겼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팔아야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다. 보유 1년 미만일 때 팔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다. 분양권 양도는 2021년 5월 31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졌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는 지역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주택매도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매각 주택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될 경우 계약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계약금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전 받고 계약서만이 됐다면, 그 때는 매매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없었다고 보지만, 계약금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후 받았으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고 보고 양도세 중과 여부를 따지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고, 비조정대상 지역에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을 경우 비조정대상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주택은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 하위 10% 기업의 164배"

국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이 상위 10%인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로 36조6천763억원(잠정)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39조7천132억원)의 92.4%에 해당한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얻기 위해 연구·인력 개발에 쓴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올해보다 28%나 깎은 것은 이런 시대적 필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